국민의힘 "이준석 가처분 재판부 바꿔달라"

법원에 4 · 5차 가처분 재판부 재배당 요청 "51민사부만 배당, 공정성 의심하기 충분"

국민의힘이 21일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 석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으 나 법원이 난색을 표해, 실제 기피 신청이 받 아들여질 지는 미지수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공문을 통해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 비대 위 비대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 지 4,5 차 가처분을 심리하는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남부지법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제51민사부는 이 대표가 앞서 주호영 비 대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래 총 5건의 가 처분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지난 1, 2차 가 처분 사건에서는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를 결정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사건 재배당 요청 공문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법관사무분담 상으로 신청합의부로 제51민사부 외에 제52 민사부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 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볼 수 있다"고 주 장했다.

특히 1차 가처분에서 주호영 비대위의 효

력 정지를 내린 재판부가 다시 재판을 진행 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대로 담보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또한 "5차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중 1인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제51민사부 재판장 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동창"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현 재판부(제51민사부)는 '절 차적 위법 판단'에서 더 나아가 확립된 법리 와 판례를 벗어나 '비상상황 해당성 및 비상 대책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라는 정치의 영 역까지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관 등의 사무 분담 및 사건배 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제6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국민의힘은 서울남부 지방법원장께 위 사건들의 사무 분담을 변 경하여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여 주실 것 을 정중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준석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는 으레 '지연전술'이라고 받아 들이겠다"며 "이준석 잡기 할 시간에 물가와 환율을 잡았으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한다"고 꼬집었다.

가처분 재판부와 전 비대위원이 대학 동 기임을 기피 신청 사유로 제기한 데 대해선 "신청해도 제가 신청할 때 해야지 본인들이 유리할까봐 기피 신청을 한다는 게 말이 되 나"라며 "대한민국 법조인 중에 서울대 출신 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받아들여지면 앞으 로 대한민국 법정에서 얼마나 웃픈 일들이 일어날지"라고 했다.

남부지법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제52민

사부는 친족인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등에서 수임한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유 의할 사항을 규정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 회 권고의견 8호에 따라 제51민사부 재판장 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재 판부로서 해당 사유가 있는 사건 외 다른 사 건은 배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사실상 국민의힘의 현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

최이슬기자

민주 "尹 유엔 연설, 공허한 구호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첫 유엔총 회 기조연설에 관해 "공허한 구호에 그쳤다"는 입장을 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국회 소통관 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11분간 이 뤄진 연설에서 21번이나 자유를 언급했지만, 추상적인 구호에 그쳤다. 국제사회의 흐름과 도 동떨어져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고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팬데믹, 탈 탄소, 디지털 격차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제적 자유 와 연대를 강조했는데 그 해결책이 자유라니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특히 윤 대통령이 강조 하는 자유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 이 주장하는 가치 외교에 전적으로 편입하려 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

이어 "가치 외교로의 편입이 우리의 국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명확한 판단이 필 요하다"면서 "우리의 국익은 실용주의적 균형 외교에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얘기했다.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나 비 핵화 문제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유엔의 여러 나라는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명확한 비전과 해법을 듣길 원했을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오늘 유엔총회 연설을 무엇을 위한 연설인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의 이번 해외 순방은 시작부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며 "윤 대통령은 남은 기 간 국익에 충실한 외교와 성과로 국민의 걱정 을 덜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부산에서 진행된 현장최고 위원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의 연설에 대한 민 주당의 부정 평가가 잇따랐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너무 추상적이고 하나 마나 한, 한 가롭고 공허한 단어들의 조합에 불과했다"고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우리나라 현실과 동떨어진 말 씀 같아 '앙꼬 빠진 찐빵'이란 생각이 들었다" 고 꼬집었다.

서선옥기자

김진표 "원내대표 세번씩이나"…주호영 "당이 워낙 어려워"

김진표 "양당 쟁점, 모든 것 마비시키면 안 돼" 주호영 "공정·중립적으로 국회 이끌어달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취임 사흘 째 인 21일 김진표 국회 의장을 만나 여야 협치를 위한 중재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정쟁 으로 인한 입법 마비를 우려하며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장실로 예방온 주 원내대표에게 "축하한다"며 "저하고 같이 17대 국회부터 정치를 같이 했는데 남들은 한 번 하는 원내대표를 세번씩이나 하는 게 원내 대표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

그러자 주 원내대표는 "지금은 뭐 당이 하도 어려운 상황이니까"라며 "의장께서 잘 좀 여야 간 잘 중재를 해주시고 국회가 국민들 볼 때 제대로 좀 협치하고, 제대로 된 법을 만드는 것 같은 걸 잘 좀 지도해달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주 원내대표가 정치 경험도 많고 경륜도 풍부하고 특히 원내대표 경험이 많으 니까"라며 "지금까지 야당 때만 원내대표였느 냐"고 물었다.

이에 주 원내대표가 "예"라고 답하자 김 의 장은 "이제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니까, 입 법부 쪽에서 민생 문제로 직결되는 것"이라며 "일단 정치적으로 양당이 서로 쟁점이 있고 결 렬할 수 있지만 그것만 갖고 모든 것을 다 마 비시키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민생 경제 법안이나 이런 걸 다 진행시키면서 정치적인 접점은 또 계속 풀 어야 (한다)"며 "이제는 정치가 워낙 성숙된 정 치 같은데, 과거에는 국회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이 되면 그러다 더 마비 돼 버린 다"고 우려했다.

김 의장은 이어 "주 원내대표가 오면 이제 그런 정치 안 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주 원내 대표는 "저희들이야 뭐 하나 스톱되면 올스톱 되고…주로 야당이 그랬다"며 웃어보였다.

이에 김 의장은 "야당도 이제 집권한 여당이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의장과 20여 분 가량 비 공개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 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양 곡관리법 개정안이 여야 대치 중인데 관련 논



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오늘은 의장을 처음 뵙고 의장께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국회를 이끌어 달라, 국회가 상생 협치의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조정, 중재해달라고 부탁의 말 씀을 드렸다"고 답했다.

여야정 협의체 관련 논의 여부에 대해서도 "여야정 협의체 말씀은 없었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박홍근 더불 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했다.

김재환기자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 사 제 보 (062)222-2580

광고 문의 (062)228-2580

